



양문석 위원, “지상파에 700MHz를” 미래부와 국무조정실에 공식제안

세계 방송기술의 거대한 흐름으로 평가받는 UHDTV 경쟁력 제고를 위해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를 조속히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CES 2014를 다녀온 직후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상파 콘텐츠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가 UHD 방송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부가 하루빨리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양 위원은 지상파 UHDTV 방송 실시를 위한 700MHz 주파수 대역 방송용 조기 할당과 지상파 UHDTV 방송 표준화 작업 추진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무조정실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위원은 CES 2014를 통해 UHDTV 발전이 시대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었다며, 세계 UHDTV 시장이 일본의 기술력

과 중국의 가격 경쟁력으로 고착화 되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UHDTV 발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양 위원은 일본의 소니가 구축한 UHDTV 4K 제작 생태계와 중국의 저가 UHDTV 수상기를 언급하며 그 반대급부로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UHDTV 발전 정책의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양 위원은 현재 미래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발전 정책이 철저하게 유료방송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비판하며 지상파 중심의 UHDTV 발전을 촉구했다. 실제로 미래부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UHDTV를 프리미엄 서비스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양 위원은 미래부가 추진하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은 한계가 있으며, 지상파 중심의 UHDTV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방송 콘텐츠의 80%를 생산하는 지상파가 UHDTV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력이 깔려있는 셈이다.

양 위원은 지상파 중심의 UHDTV 전략 수립을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의 조속한 방송 할당도 주문했다. 양 위원은 “(최시중 위원장 시절) 700MHz 주파수 중 40MHz 폭을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용으로 용도 지정하면서 당시 김중식 부위원장과 홍성규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과 본인은 68MHz를 지상파에 용도 지정하자고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최시중 전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상임위원이 68MHz 폭에 대해 지상파 활용을 주장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은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할당은 통신업계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막대한 통신용 주파수가 확보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연구반을 꾸려 활용처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반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올해 3월부터 논의를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으로 난시청 해소 및 UHDTV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며 통신사는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위한 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해당 주파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미래부의 생각은 확고한 편이다. 미래부는 모바일 광개도 플랜 2.0을 기점으로 통신사에 막대한 주파수를 밀어주는 한편,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작업에 나섰다. 모바일 광개도 플랜 2.0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40MHz 폭이 통신에 할당되었으며 나머지는 용도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양 위원이 남은 68MHz 폭을 방송에 할당하자고 주장한 것이다.(2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방송기술저널 184호는 2월 12일 발행됩니다]

“2015년 지상파 UHDTV 본방송 하겠다” 700MHz 대역 주파수 조속히 방송에 할당해야

1월 17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등이 공동 개최한 ‘UHDTV 활성화’를 위한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본 세미나는 이영주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의 전체사회로 유익선 한국방송학회 회장의 환영사와 김형중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회장의 인사말,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의 축사로 진행됐으며 이후 김현주 광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임중곤 KBS 기술연구소 팀장, 정준희 중앙대학교 교수,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종합토론에는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상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정책국장, 임중곤 KBS 기술연구소 팀장과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 정준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본 세미나에서 지상파는 2015년 지상파 UHDTV 본방송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의 조속한 방송 할당을 주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중곤 KBS 기술연구소 팀장은 발제를 통해 2014년 6월 지상파 UHDTV 송신 종합표준을 완료하고 12월까지 60P UHDTV 실험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 주파수 효율이 나쁜 기존의 MFN에서 효율이 좋은 SFN 방식으로 전환해 난시청 해소에도 상당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12월에는 UHDTV 제작 및 편집 시설을 구축하고 방송 기술기준 제정도 마칠 것이라고 전했으며 늦어도 2015년 6월 수도권 송신 시스템과 주조정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5년 12월까지 지상파 UHDTV 본방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상파 UHDTV 본방송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조속한 방송 할당이다. 해당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

신위원회가 공동 연구반을 꾸려 방송과 통신, 둘 중 하나에 할당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해당 주파수는 통신보다는 방송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품질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해당 주파수는 방송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임 팀장의 발언은 일종의 승부수로 여겨진다. 작년에 국민행복 700 플랜을 발표하며 해당 주파수의 지상파 할당을 요청했으나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는 정부의 무관심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표준화 추이를 통한 지상파 UHDTV 가능성을 배제하고 미래부 산하기관인 TTA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상파 UHDTV 표준을 기술 보고서로 하향 채택한 바 있다. 또 모바일 광개도 플랜 2.0 및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지상파가 난시청 해소 및 UHDTV 발전에 활용해야 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 방송 활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상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행복 700 플랜에 이어 2015년 UHDTV 지상파 본방송이라는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했다는 해석이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발제자들도 임 팀장의 의견에 동조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에 힘을 실었다. 이에 정준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방송 및 제반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공적 재화 구조에 의거해 타당한 결론이다”고 단언했으며,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해외 활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해당 주파수의 글로벌 통신화를 부정한다는 전제로 “방송에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더욱 부합된다”고 밝혔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지상파의 야전 사령부, 관악산 송신소

지상파 MMS 실험방송의 전진기지,
지상파의 야전 사령부인 관악산 송신소 전경
최진홍 rgdsz@kobeta.com



방송과기술

BROADCASTING & TECHNOLOGY
VOL. 217 January, 2014

01



Editor in Chief
대한민국의 방송은 안녕하십니까?

Field Issue
2013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Broad Sharing
사람이 아름다운 YTN 기술국 인사이드

Enterprise News
Partner 발행기 - 방송지원센터 및 마루

Back to Basic Season 1
기술음악 이론 및 음악에 대한 이해

Expert View-Show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문화 탐방기

Tech & Trend
파나소닉 코덱 AVC-ULTRA 제4회

Tutorial
Pablo Rio Tutorial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www.kobeta.com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A(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 전시회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사설

지상파 UHDTV, 이제 정부가 대답할 차례다

지상파, 2015년 UHDTV 본방송

1월 17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UHDTV 활성화를 위한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준곤 KBS 기술연구소 팀장은 2012년과 2013년 2차에 걸친 세계 최초의 지상파 UHDTV 송수신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 6월까지 송수신 정합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적어도 연말까지 방송기술기준을 마련한 뒤 2015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실시하겠다는 지상파 UHDTV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조속히 방송에 활용해야 한다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있다. 이제 정부가 지상파 UHDTV 추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

최근 지상파 방송사는 '국민행복 700 플랜'을 통해 방송용 필수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에 '빌려주면' 보편적 UHDTV 방송을 구현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지상파의 이러한 제안을 묵살하며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발전에만 팽목적으로 매달려 있다. 시청자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시청자에게 무료 보편의 고품질 방송을 제공하겠다는 지상파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료방송 특혜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물론이며, 전

파진흥기본계획에도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상파의 로드맵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국민행복 700 플랜'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2015년 지상파 UHDTV 본방송을 천명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지상파는 오는 5월말부터 12월까지 초고화질의 UHDTV(4K 60프레임) 방송을 단일 주파수망(SFN) 방식으로 실험방송을 실시해 뉴미디어 플랫폼 발전 및 직접수신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더욱 완성도 높은 UHDTV를 선보이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지상파의 제안, 정부는 귀 기울여야

정부는 지상파가 제안한 UHDTV의 미래를 위해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활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TV 정책 추진이라는 탓에 빠져 지상파의 제안을 애써 무시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상파 방송사 스스로가 700MHz 대역 주파수 확보에 이은 2015년 UHDTV 상용화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한 이상, 정부는 대응적인 차원에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안을 했다. 이제 정부의 차례다. 보편적 고품질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과 시청자 복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당장 지상파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종합편성채널 및 케이블 MSO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로 여겨지는 8VSB 허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장 미래창조과학부는 늦어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 8VSB 기술기준 개정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입법에고기간 및 케이블 MSO의 상품구성과 약관승인, 시설 변경허가 등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는 오명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은 8VSB 허용이 급물살을 탄다고 해도 여전히 심각한 결격사유로 남을 전망이다. 여기에 케이블 MMS 현실화와 지상파 MMS가 상충되는 문제는 지상파 방송의 형제화라는 관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PP 퇴출을 막기 위해 컨버터 비용을 아우르는 막대한 초기 사업비도 변수로 부각된다. 미

래부가 컨버터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편 전격적인 8VSB 허용을 두고 각 케이블 MSO의 이해득실 계산도 빨라지고 있다. 8VSB 허용을 통해 실보다는 득이 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각자의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막대한 초기 사업비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는 만큼, 각 케이블 MSO의 8VSB 대응도 상이한 편이다. 8VSB 허용을 통해 가입자 방어에 나서며 수동적인 대응을 고수하는 MSO가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율이 높은 MSO는 컨버터 지원보다는 디지털 케이블 전환 자체에 역량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콘텐

트들을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양 위원회 기자화견이 미래부 주도의 유료방송 중심 UHDTV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위원회는 콘텐츠 수급을 이유로 지상파 중심의 UHDTV 발전을 촉구해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의 보편적 확대와 더불어 이를 통해 최소 30%대의 직접수신을 제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1월 20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를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다. 양 위원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지상파는 방통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로드

츠 산업 붕괴 및 특혜, 이어지는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과 지상파 방송의 형제화가 8VSB의 근본적인 문제라면 막대한 초기 사업비와 더불어 시청자의 시청권 피해는 실질적인 문제로 여겨진다. 실제로 8VSB가 허용되면 케이블 MSO는 전국을 셀 단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가입자는 막대한 시청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상이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케이블 MSO가 시장의 혼란은 물론, 궁극적으로 컨버터 지원과 디지털 전환 독려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확률도 높다.

이는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겪을 불편 및 컨버터 비용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화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맵과 안을 만들어서 신청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700MHz 주파수의 우선권이 될지 심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주파수는 지금 논의할 건더기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발언은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상파는 UHDTV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으며, 이를 위해 방송 주파수의 조속한 할당을 촉구해왔다. 심지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상파 UHDTV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지상파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방송용 주파수 할당은 물론, 해당 주파수 할당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법원, “MBC 노조원 징계 무효” 즉각 복귀해야 VS 항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정영하 전 MBC 노동조합 위원장 등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MBC 총파업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MBC 사측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해고자 복귀를 둘러싼 노사 간 법적 공방이 지루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MBC가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파업을 진행한 PD와 기자 등에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고 선고하며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000만 원을, 정적자 38명에게는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MBC 노조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성명을 통해 "조합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존중하는 바이다. 아울러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해고자 복직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판결을 따라 즉각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뜻이다. 동시에 MBC 노조는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MBC 본사 남문에서 해고자를 위한 조촐한 환영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차원의 성명도 발표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2014년 1월

17일, 상식과 정의가 승리했다"며 "재판부는 2012년 170일에 걸친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자평했다. 동시에 언론노조는 "국회방송공정성특위에서도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채택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해직 언론인 복직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공동된 명령이 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특위는 활동종료 직후 결의문을 통해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해결한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MBC 사측은 법원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사측은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설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됐으며,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당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고,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MBC 사측은 자사 뉴스와 신문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과도하게 파려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은 조상운 국민일보 기자의 해고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향후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3기는 어떤 인물로 구성될 것인가. 벌써부터 방통위 안팎에서 연임과 교체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자리를 둘러싼 하마평도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등장으로 그 힙과 위세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방통위는 주요 방송정책을 책임지는 핵심조직이다.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눈치 게임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일단 이경재 위원장은 연임으로 가닥이 잡힌다. 위원장 임기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고 현 정부와의 교감도 상당히 때문에 무난히 연임이 가능하리라는 것에 의견이 모인다. 당장 정치권에서도 친박계 정치인 출신이자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방통위를 본궤도에 안착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된다. 게다가 현 정권의 인사가 집권 초기 파형을 겪은 이후 소위 '평타는 가능한' 올드보이의 재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만큼, 이 위원장의 연임은 가장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평소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에 있어 강한 자신감을 비친 만큼, 위원장 자신도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도 파다하다.

여당 추천의 2인인 김대희 위원과 홍성규 위원회 거취는 불투명하다. 김대희 위원회는 현재 EBS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신용섭 전 위원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궐로 방통위에 입성한 만큼 조심스럽게 연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다른 상임위원 사이에서 존재

감이 없었다는 지적이 부담이다. 다만 상임위원은 1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 위원회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의외로 연임이 수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성규 위원회는 임기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교체가 확실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정리하자면, 여당 추천 2인은 전부 교체되거나 최소 한 명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 여당 추천 위원으로 이기주 방통위 기획조정실장과 서병조 미주개발은행 수석컨설턴트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또 유연재 경기도 정부부지사과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기주 원장은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인물로 같은 직책에서 근무하다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후 상임위원이 된 김대희 위원과 비슷한 경력을 가진 점이 눈에 들어온다. 김대희 위원이 연임하지 못할 경우 가장 유력한 후임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여기에 'KBS 기자 라인'인 유연재 경기도 정부부지사과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홍성규 위원이 물러날 경우 가장 확실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재우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기치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국무총리실 고위 인사들의 물갈이가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불거질 확률도 높아 최 실장의 상임위원 가능성도 조금씩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방통위와 미래부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실제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한 편이다.

야당 추천의 2인인 김충식 위원과 양문석 위원회 거취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편이다. 우선 양 위원회는 이미 연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회는 자리에서 물러나 본업인 교수로 돌아가려는 의사를 접고 연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인사의 후임으로는 김재홍 경기도 교수와 조순용 전 대통령 정부수석 비서관, 여기에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추천으로 MBC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완기 전 미디어오늘 사장도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며 한국방송학회 회장을 역임한 강상현 연세대학교 교수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역임한 신태섭 동아대학교 교수도 있다. 강 교수는 양문석 위원회 후임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신태섭 교수의 경우 미디어 분야에서 전두력 있는 인물로 분류되는 만큼 야당 추천 이사로 이름을 올릴 확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야당 추천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전변한 민주당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거론되는 인물의 면면이 극적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여당 추천의 경우 관례적으로 판료와 현업, 그리고 야당 추천의 경우 관례적으로 학계와 진보시민운동에서 각각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추천 이사가 홍성규 위원만 물러난다는 가정을 세운다면 'KBS 기자 라인'의 한 명이 3기 상임위원이 될 확률이 높으며 야당에서는 양문석 위원만 물러날 경우 신태섭 교수의 취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 위원이 자신의 후임으로 강상현 교수를 추천한다면 학계와 진보시민운동의 후보군이 뿔뿔해질 경우도 생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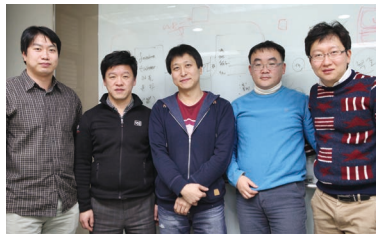
“2015년 지상파 UHDTV 본방송 할 것”(임준곤 KBS 기술연구소 팀장)

☞1월 17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UHDTV 활성화를 위한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 세미나에서...**이제 정부가 지상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순간!**

“오늘 판결은 MBC 본부 조합원들이 170일간 벌인 MBC 정상화를 위한 파업이 정당했음을 명시함으로써 회사가 그동안 해 왔던 불법 파업이라는 주장이 허구였음을 밝혔다”(MBC 노동조합 성명)

☞1월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등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직후...**공정방송을 위해 싸운 해직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계기가 되길.**

KOBETA 뉴미디어 연구반 2기 출범



새로운 방송기술 개발 및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위상제고를 위한 뉴미디어 연구반 2기 활동이 지난 1월 9일 1차 회의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뉴미디어 연구반 2기는 지난 2013년 말 연합회가 뉴미디어 연구개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결과, '방송용 통합 소셜 허브 플랫폼 개발'로 사업을 정하고 총 4명의 연합회 회원이 본 연구반에 참여하게 됐다.

'방송용 통합 소셜 허브 플랫폼'은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는 방송국의 SNS 채널(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합 관리하여 청취자의 손쉬운 참여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방송 제작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다. 총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3월 정보취합과 관련 연구를 마치고 적어도 6월까지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후 KOBETA 2014의 연합회 부스에서 진행 결과가 전시될 예정이며, 모든 개발이 끝난 후 각 회원사의 방송제작에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뉴미디어 연구반 2기는 하재현 연합회 정책실장, 이정규 tbs 뉴미디어국 차장, 김형순 아리랑 국제방송 뉴미디어팀 부장, 강창국 YTN 기술연구소 연구원, 박명석 CBS 기술연구소 연구원, 이승현 OBS 제작기술팀 사원으로 구성됐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최동환	편집주간 이성의
편집위원 김윤중 서상원 안창준	송주호 박명석
편집장 최진홍	취재기자 백선애 이진범
기획실 강동균	인쇄인 성진&화성프린원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총관 15층	
전화 02-3219-5635	팩스 02-2647-6813
트위터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UHDTV는 진화 중, 우리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4의 화두는 UHDTV로 수렴된다. UHDTV 시장 규모가 2013년 29억7천만 달러에서 2014년 91억1천만 달러, 2015년 111억5천만 달러로 팽창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CES 2014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국내 UHDTV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의 80%를 차지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표준 누락과 방송용 주파수 미배정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세계 UHDTV 시장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시장 조사 전문가인 디스플레이서치의 2013년 3분기 UHDTV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일본의 소니가 23.4%의 점유율로 1위를 수성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2자리 점유율을 기록한 삼성전자(10.1%), 그리고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하는 LG 전자(9.8%)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HDTV 시장에서 한국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일본 제조사의 기술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가전사들의 맹공이 연일 계속되는 형국인 셈이다.

이런 분위기는 CES 2014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소니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제조사들은

막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UHDTV의 비전을 선보였으며 중국의 제조사들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빠르게 UHDTV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전략을 천명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보급형 UHDTV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세계 UHDTV 가격이 평균 1,120달러로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 가운데 보급형 UHDTV를 둘러싼 시장 주도권 쟁탈전도 더욱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0~50인치에 해당되는 보급형 UHDTV의 경우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한 점유율 확대의 최전선에서 있다는 평가다. 보급형 UHDTV가 낮은 가격과 기술력을 무기로 전체 TV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UHDTV의 미래는 어둡다. UHDTV 발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미국이 최근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대로 된 정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160개 지역 방송사를 보유한 싱클레어 방송그룹이 본격적으로 UHDTV 실험방송을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정책에서 한발 뒤지고 있다는 평가다. 작년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미국 FCC를 다녀와 “미국은 UHDTV 상용화를 고려하지 않는

다”고 말했지만, 이제 상황이 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UHDTV 육성 정책은 실질적인 발전과 정부의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KBS를 중심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UHDTV 기술력을 확보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유료방송 중심의 전략만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처도 거대 통신사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할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 콘텐츠의 대부분을 제작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UHDTV 경쟁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UHDTV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해 CES 2014를 참관한 양문석 상임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지상파 UHDTV 진흥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콘텐츠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는 문화주권이 송두리째 외산 UHDTV를 앞세운 외국에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양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UHDTV를 위한 700MHz 대역 주파수의 조속한 방송할당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케이블-IPTV, 대회전 예고

케이블과 IPTV의 미디어 플랫폼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위시한 정부의 지상파 옥죄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료방송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케이블과 IPTV의 대회전도 본격도에 올랐다.

케이블은 UHDTV를 통한 전방위적 가입자 수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지상파 UHDTV 정책 누락, TTA의 지상파 UHDTV 표준 거부 등 정부가 사실상 지상파 UHDTV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은 충분한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는 분석이다. 이에 케이블은 작년부터 UHDTV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CES 2014에서 수도권 최대 케이블 MSO인 씨앤앰이 LG전자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셋톱박스 방식의 UHDTV를 선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케이블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UHDTV 전용채널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이 HTML5로 수립되는 방송의 외연적 확대에 성공할 경우 그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료방송의 더딘 디지털 전환을 우려하는 정부와 영향

력 확대를 기치로 내건 종합편성채널의 이해관계로 탄생한 8VSB 허용도 케이블의 전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맞서는 IPTV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점하는 케이블이 가입자 수성을 목표로 한다면, IPTV는 공격적인 영업으로 몸집을 불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IPTV 1위 사업자인 KT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기반한 모바일 IPTV를 선봉으로 삼고 있다.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망’의 개념을 확장시킨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전략인 셈이다. 현재 IPTV 3사는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모바일 IPTV를 성공적으로 론칭해 시장에 안착시켰으며,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다만 모바일 IPTV의 발전은 공격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방송과 주파수 할당전을 벌이는 통신이 모바일 IPTV를 통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상존하는 부분은 추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듯 케이블과 IPTV의 대회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유료방송 규제완화 및 진흥정책도 고조되고 있다. 이미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노골적인 유료방송 진흥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유료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어렵다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기존의 개정된 방송법에 IPTV 법을 추가한 통합 방송법을 관철시킨다는 2차 전략도 현재 진행형이다. 케이블과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규제완화가 2월 임시국회, 혹은 2015년을 목표로 하는 통합 방송법 처리로 현실화된다면 양측의 격돌은 더욱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추후 지상파와의 재송신 협상과 DCS와 같은 이종기술의 도입 등에서는 각 유료방송이 함종연환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한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상파 방송은 미증유의 위기에 빠졌다. 경쟁자인 유료방송 규제가 순차적으로 풀리며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기반 자체가 상실될 위험이 커졌다. 특히 지상파 MMS와 케이블 8VSB 허용이 상충되는 부분과 정부 주도의 지상파 UHDTV 전략 좌초, 방송용 주파수 미확보는 대형 악재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백선하 baek@kobeta.com

SOD(SkyLife on Demand) 저작권 논란, ‘점입가경’

콘텐츠 시장 교란이나, 정상적인 서비스냐

KT 스카이라이프의 클라우드 PVR 서비스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콘텐츠 시장 교란 및 저작권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최근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차세대 PVR 서비스인 ‘SOD(SkyLife on Demand : 스카이라이프 온디맨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SOD는 KT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을 클라우드를 비롯해 USB 메모리와 외장 HDD에 자유롭게 저장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고 싶은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 모든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녹화하고 원하는 때에 재생해 볼 수 있는 개인 녹화 장치인 셈이다. KT 스카이라이프는 2006년 SD로 송출되던 위성방송을 HDD에 녹화할 수 있는 PVR 셋톱박스 상품을 출시한 경험이었다.

SOD의 강점은 꽤 다양하다. 우선 HD급 고품질 방송을 녹화하는 것 외에도 USB 단자를 통한 디스크 저장도 물론, 클라우드 저장까지 지원해 접근성을 크게 높인 부분이 특기할 만하다. 또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는 하드디스크 PVR과 달리 원격 저장공간인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한없는 저장용량을 자랑한다. 심지어 다수

의 채널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예약 녹화기능도 구비하고 있다. 다만 클라우드를 통해 녹화된 콘텐츠는 최대 1개월이 지나면 자동삭제된다. 1개월 이상의 콘텐츠 녹화를 원한다면 별도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추후 정식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SOD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은 벌써부터 뜨겁다. 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적사용과 공적활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콘텐츠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보다는 가입자 개인이 별도의 저장장치(클라우드)에 콘텐츠를 저장하면 사적사용에 해당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VTR이나 하드디스크에 콘텐츠를 저장하는 방식이 사적사용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버에 올라간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은 공적실행에 해당된다. 사적사용과 공적실행은 엄연히 의미가 다르며, 이는 서비스의 주체와 객체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구분된다.

이 상황에서 SOD 가입자에게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콘텐츠를 내려받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저작권 침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콘텐츠가 KT 스카이라이프의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를 가입자가 녹화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KT 스카이라이프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자신들이 SOD 가입자에게 클라우드 서버 공간만 제공할 뿐이며, 이는 로컬에 저장하는 기존의 PVR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가입자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녹화하고 시청하는 것을 두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모델이라고 비판하는 쪽과 기존의 PVR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고 버티는 쪽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SOD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의지가 변수다. SOD를 저작권 불법이라고 보는 쪽은 판을 깔아준 KT 스카이라이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며, 문제없다고 보는 쪽은 가입자의 개인 의지에 저작권 문제를 맡겨버린다.

하지만 SOD 자체가 콘텐츠 산업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는 것에 중론이 쏠리고 있다. 당장 건별로 금액이 결제되는 VOD 서비스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SOD의 수혜를 받는 이들이 200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핫한 속의 태풍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추후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또 국내 P2P 사이트의 판례를 참고해도 SOD는 상당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와 CJ 계열의 PP는 SOD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CBS 창사 60주년 비전 선포식

변상욱 본부장, “보도기능에 문제 없다”

1월 14일 CBS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 센터에서 창사 6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을 열고 ‘크리스천 스마트 미디어 그룹’을 지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사장 권오서 목사와 이재천 사장을 비롯해 교계와 정·재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본 선포식에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성 정의당 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라디오로 시작한 CBS가 TV, 인터넷, 모바일로 확장해 이제 스마트 미디어 부문에서는 어느 언론사보다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CBS의 강점인 뉴스, 시사, 음악, 선교 등의 프로그램을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맞게 유통하고 개방과 공유, 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를 개발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시청자들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유사보도 지정도 선포식의 이슈였다. 이에 변상욱 콘텐츠 본부장은 CBS에 대한 방통위의 유사보도 지정에 대해 작정한 듯 강경한 발언을 쏟아 내었다. 변 본부장은 “CBS는 창사 당시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방송을 시작한 방송사였다. 당시에는 방송사에서 교양강좌로부터 영어회화까지 라디오를 통해 모두 방송했

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62년 제3공화국에서 방송규정을 정했는데 당시 기독교 방송은 교양, 복음, 음악, 강화(포럼, 심포지엄), 뉴스, 시사 등이 허가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본부장은 “방통위의 유사보도 조치는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경제채널과 오락 채널의 보도를 규제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미 방통위위원장의 문제 없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비전 선포식 자리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유사보도 발표 직후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자 지난 7일 방통위가 유사보도 매체로 지정한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보도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하는 아이러니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당시 CBS 라디오에서 “제재는 없겠지만 종교방송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도는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한편 CBS는 비전 선포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CI를 발표하며 “당신을 믿습니다(We Trust You)”라는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사회 통합을 위해 이산가족과 함께하는 ‘휴커밍데이’를 통해 대통합의 가치를 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소치 올림픽, 광고시장에 어떤 영향?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1월 16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광고경기 예측지수를 발표했다. 특히 코바코가 2월 광고시장에 상당한 혼풍이 불 전망이며, 불투명한 대외 경제여건과 국내 내수경기 침체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확실하게 제거된다면 광고시장 자체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실제로 코바코의 2월 광고경기 예측지수를 보면 102.9를 기록, 1월 대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2월에 열리는 소치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예측지수는 국내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웹조사 패널을 구축해 매월 정기적으로 다음 달 주요 5개 광고매체의 광고비 증감 여부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해당 업종의 광고주 중 광고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많으면 100을 넘고, 반대의 경우 100 미만으로 떨어진다.

코바코에 따르면 예측지수가 지상파 TV 105.0, 케이블 TV 103.7, 라디오 95.8, 신문 98.1,인터넷 108.0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승세다. 다만 업종별로는 식품, 음료 및 기호식품, 패션, 수송기기,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았지만 제약 및 의료, 가정용품, 증권 및 자산운용, 여행 및 레저,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광고 등 업종은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코바코의 예측지수 발표를 두고 2월 광고시장 전망이 무작정 ‘밝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1월에 비해 강보합세를 유지하며 광고 비수기인 2월에 예측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지만, 소치 올림픽과 김연아 선수 은퇴경기라는 상승요인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수치가 낮다는 반론도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이석채 영장 기각…검찰 ‘고민’

범죄혐의 소명 및 구속 상당성 부족?

법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KT 본사와 계열사는 물론 이 전 회장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네 차례에 거친 소환조사를 벌여 전방위적 조사를 벌였음에도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자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전 회장의 신변확보에 중점을 두며 당초 고발내용보다 혐의를 크게 축소시켜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는 전략으로 공을 들였던 검찰의 전략이 허를 찔린 셈이다.

게다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가 범죄혐의 소명 및 구속 상당성 부족이라는 점도 치명적이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고 자부한 검찰이 자존심을 잔뜩 구겼다는 후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대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장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지가 속한 공동취재위원단의 취재결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부장이 전격 교체되며 수사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과, 구성요건이 매우 불확실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판단여부에 따라 검찰이 쉽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수사의 속성상 단시간에 승부를 보려는 성급한 행동이 화를 불렀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자체가 실시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기업인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CJ부터 시작된 강도높은 수사는 이석채 회장 기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9년부터 임직원의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2010~2012년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펀드로부터 사옥 28곳을 감정가의 75%만 받고 매각해 회사측에 8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또 이 전 회장은 자신과 8촌 친척관계에 있는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해 무려 137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혐의와 스마트를 사업을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부당한 투자를 지시해 회사에 2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언론노조, “기자 취재권을 보장하라” 미디어 오늘 기자 약식 기소, 무슨 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C는 미디어 오늘 조수경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에 앞서 조 기자는 MBC로부터 퇴거불응을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며 검찰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약식 기소했다. 무슨 일일까?

작년 6월 대표적인 매체 비평지 미디어 오늘의 조수경 기자는 취재차 MBC를 방문했다. 당시 조 기자는 MBC 노동조합이 발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김장겸 보도국장의 의견을 묻는 한편, 가벼운 인사를 나눌 겸 보도국장실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국장은 직원을 불러 조 기자를 끌여냈으며 이 과정에서 작은 실랑이가 발생했다. 이후 MBC는 조 기자를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대신 고소 내용에 없던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의 약식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조수경 기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심

대한 언론 자유 침해로 규정한다”며 “미디어 오늘 기자가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가거나 보도국장을 만나는 것은 정당한 취재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자신을 취재하려는 기사를 고소한 것은 공영방송 MBC의 망가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한술 더 떠 검찰이 기사를 기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고 꼬집는 한편, “기자들은 가만히 기자실을 지키고 있다가 출입처에서 던져주는 기사만 써야 하는가. 2014년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기는 한지 깨닫스러울 뿐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더 이상 공영방송을, 대한민국 언론을 회화화하지 말고 당장 조수경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검찰과 MBC의 대응, 사법부의 판단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방통위, 종편 특혜 조장하나 기존 특혜에 1사 1렘까지

재승인 심사 정국에 돌입한 종합편성채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의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벌써부터 추가적인 종편 특혜를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다.

당장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종편이 누리고 있는 무리한 특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월 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종편국민감시단 토론회에서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종편의 황금채널 배정 및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과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신료 배분을 꼬집으며 “종편 승인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은갖 반칙을 통해 종편에 배분 각종 특혜들을 폐지하고 다른 방송사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편 출범 당시부터 시작된 무리한 특혜를 재승인 심사 정국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종편은 지상파 인접번호 부여는 물론, 의무재송신 대상과 수신료 배분이라는 상충된 특혜를 지속해서 누리고 있다.

재승인 심사 정국에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8VSB 허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종

편에 대해 방통위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국정감사 시기에 종편에 대한 비판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 두 곳 탈락을 운운하며 위기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 이른바 미디어렐 법을 종편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디어렐 적용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종편 4사가 1사 1렐을 염두에 둔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편은 코바코와 SBS미디어크리에이티브에 편입되면 자신들의 광고사업이 힘들 것으로 보고, 1사 1렐을 목표로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종편의 시청률이 1%를 넘는 상황에서 1사 1렐 지정은 기존 약탈적 광고영업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과 각종 규제를 통해 종편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종편이 미디어렐을 통한 합법적 광고영업과 기존 광고주와의 연결을 통한 불법적 광고영업을 동시에 하는 ‘투 트랙’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변수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단신 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 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R·D, ICT 관련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20개의 비즈니스 모델은 작년 하반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수행한 공공 데이터 개방 관련 정책연구의 결과물로서 미래부에서 개방하는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0여명의 공공 데이터 분야와 앱 개발 전문가들이 미래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DB를 분석하여 20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한 것이다.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사업화 아이디어)로는 레저활동용 위치 서비스, 인체정보를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피팅(fitting) 시뮬레이션 서비스, 동물 질병 안내 앱, 구인구직정보 서비스, 자금 지원 대비 성과 분석서비스, 사교 욕비 감소를 위한 공유 E-learning system 등이 있다.

20개의 비즈니스 모델 중 3개의 모델(한국인 인체정보를 활용한 가상 피팅 서비스, 의료정보 데이터 공동활용, R·D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개요, 시나리오 및 기대효과를 제공하여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획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미래부는 이러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활성화에 위해 2015년까지 보유한 DB 중 법적 제약이 있는 DB를 제외한 448개 DB를 개방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357개 DB를 개방하고 2015년까지 91개 DB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미래부의 공공 데이터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지상파 위성방송과 군 통신망 등으로 활용되는 무궁화 5호 위성이 전력공급장치 일부 고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KT와 국방부가 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으로 발사한 설계수명 15년짜리 위성이 반쪽짜리 위성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KT는 무궁화 5호 위성이 동경 113도의 적도 3만 6,000km 상공에 머무는 정지위성이며,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햇빛이 비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조정해줘야 하지만 전지판 회전을 담당하는 부분(BAPTA)에 고장이 발생하면서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KT는 고장 직후 위성 제작업체인 프랑스 알카텔과 함께 고장원인 파악에

방심위, 심의규정 개정안 발표 문제가 되던 ‘민족의 존엄성’은 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되던 ‘민족의 존엄성’ 심의규정을 결국 포기했다. 이에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심의 규정 제25조2항(민족의 존엄성)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항을 두고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자 결국 1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6개 규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하며 해당 심의규정을 누락시켰다. 이에 방심위는 신설안을 폐기하며 “현행

25조3항과 다소 중복되며 객관성 명예훼손 등 다른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및 입안예고,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에는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더불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방송인총연합회의 거센 반발이 주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로 해당 단체들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규정 개정안은 물론 ‘표적과잉심’의 ‘정치심’을 일삼는 방심위를 전방위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방송에서의 상품 등에 대한 광고효과에 대해 상품의 구체적 언급이나 사용 권유조장, 특정기능의 시연 등이 제한된다는 내용과 함께 의도적이지 않은 상표 등의 단순노출은 허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헌법과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및 기존 심의규정 총칙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에 명시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기준으로 반영했으며 자살의 수단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내용을 제한하고 투자자문방송의 정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등도 정비됐다.

방심위는 이번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으로 심의기준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환경변화를 심의규정에 반영,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과 정보통신환경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를 둘러싼 정치심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심위의 결정이 청와대의 복심단 읽는다는 비판이 상당한 반향을 끄는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방심위의 결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해당 현안이 방통위의 유사매체 지정과 맞물릴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KOBETA, 관악산 송신소 방문 지상파 MMS의 전진기지를 가다



관악산 송신소 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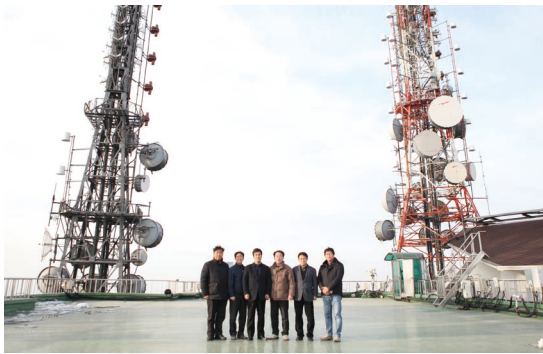
지상파 MMS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지상파 MMS 신호를 받아서 처리



실질적으로 지상파 MMS를 송출하는 탑



KOBETA 방문

나섰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2016년 대체 위성을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행히 고장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방송 및 통신 중계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다. 한편 무궁화 5호 위성의 고장과 동시에 새삼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석재 전 KT 회장의 낙마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무궁화 3호 위성 할당 매각은 지금도 널리 회자되는 대표적인 줄속이다. 당시 KT는 무궁화 3호 위성을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홍콩의 ABS에 매각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외에 무궁화 1, 2호 위성은 수명을 다했으며 SK텔레콤이 공동 투자해 발사한 한별위성은 2013년 6월 해외에 매각됐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과학기술분야 주요 R·D사업에 총 2조 1,009억 원을 지원(전년대비 10.0% 증가)하는 ‘2014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종합시행계획은 과기분야 R·D 총 예산 5조 678억 원 중 출연기관 연구연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초연구 6,967억 원, 원천기술개발 5,033억 원, 우주 3,179억 원 등 6개 분야 사업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사업(6,967억 원) 중 우수성과 창출의 핵심인 중견중 연구자 지원을 확대(2013년 3,220억 원→2014년 3,488억 원)하여 금년도 신규과제를 930여개 지원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미래도전형 과제 등 신진연구 지원(2014년 1,419억 원)을 강화한다. 특히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국제공동연구)에 글로벌 평가를 새로 도입하여 세계적 수준에서 국내 연구성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부터 유럽 ERC(유럽연구이사회) 연구팀에 연 40여명 규모로 국내연구자 방문연구를 지원하여 해외 우수연구주체와의 협력기회를 확대한다. 나노안전성, CO2 포집공정 등에서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NSF(첨단제조분야) 및 스웨덴(바이오의료·소재과학 등) 등과의 협력연구도 추진한다. 특히 금년 2월에는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BT분야 공동연구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세림테크(주) 전은창(50세) 이사와 SK이노베이션(주) 유재욱(49세) 수석연구원을 ‘이달의 엔지니어서’ 1월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세림테크(주) 전은창 이사는 초대형 타이어 제조용 고무가가치 성형 브래더(Bladder)를 개발하여, 전량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 설비인 성형기, 가류기 및 시험장치의 설계와 개발 업적이 인정되어 중소기업분야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수상자는 타이어 유니포미티(Uniformity) 검사에서 저급 품질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완제품 타이어의 일부를 영구 변형시켜서 보정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타이어 업체의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주) 유재욱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산화 촉매 및 공정개발을 기반으로 고급 운항기유 및 증질 기유 제조공정을 자체 설계했을 뿐 아니라, 혹한 지역용 경유 및 바이오 연료 제조 기술개발에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 정유 및 에너지 산업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기업 분야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창조경제의 핵심인 콘텐츠와 선를 확산 교류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중국 방송 규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차이푸차오 총국장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후진판 회장을 연이어 만나 방송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졌으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양국 간 콘텐츠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최근 중국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한류열풍을 살리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중국 체류 기간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루웨이 주임(장관급)을 만나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선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선물 추모집 및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기금 전달식에 참석했으며 이를 통해 선물 운동 등 인터넷 문화 개선을 위한 방통위 정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복면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700MHz 주파수 글로벌 통신 활용?

잘못된 보도자료의 치명적인 폐해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두고 방송과 통신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방송은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통해 난시청 해소 및 UHD TV

발전을 위시한 공적기능을

주장하고 있으며

통신은 증가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이유로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진흥을 목표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의 공적활용보다는 민영화에 관심이 많다. 이에 미래부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주도하며 유료방송 중심의 UHD TV 정책을 추진해 사실상 700MHz 대역 주파수의 지상파 활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미래부 산하 연구조직인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상파 UHD TV 표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무제한 요금제와 더불어 모바일 IPTV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통신사가 심각한 주파수 남용 사태의 원흉이라고 지적한다. 더불어 이러한 통신사에 공적활용으로 쓰여야 할 700MHz 대역 주파수가 넘어갈 경우, 철도와 의료와 같은 국가 기간 인프라의 민영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통신사들이 미국 통신사에 비해 적은 가입자를 가지면서도 막대한 주파수를 할당받았다는 비판도 가세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일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공동으로 개최한 'UHD TV 활성화 위한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700MHz 주파수 수요 및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전 세계의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을 자세히 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글로벌 통신 활용설'을 정면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의미 있는 발언이다. 주파수 민영화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원하는 이들이 "외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한 '하구'를 조목조목 파헤쳤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철도와 의료 민영화를 해야 한다. 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에게 "아니다. 외국은 무작정 철도와 의료 민영화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친 셈이다. 정리하자면,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를 원하는 방송과 통신이 각각 공적, 사적 활용을 목표로 힘겨투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파수의 사적 활용을 원하는 이들이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활용은 글로벌 추세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 교수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한 셈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시간을 돌려 2012년 2월로 가보자. 당시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측근 및 자신의 비리로 인해 낙마한 직후였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했다. 최 전 위원장이 사퇴하기 일주일 전, 기습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 40MHz 폭 상하위 통신 분할할당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쉽게 말하면, 최 전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이 첨예하게 대립하

던 700MHz 대역 주파수의 알짜배기를 통신에 후다닥 밀어주고 장렬히 산화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때, 구 방통위는 문제의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했다. 바로 WRC(세계전파통신회의)-12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활용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였다. 즉, 권위있는 세계적 회의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글로벌 활용을 결정했으니, 이제 더 이상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활용으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내용인 셈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우선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RC-12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은 공식의제가 아니었다. 구 방통위의 보도자료는 마치 WRC-12가 700MHz 대역 주파수의 글로벌 통신 활용을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물론 WRC-12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일명 제 3세계, 즉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에서 제기한 일종의 '의견'이었으며 이러한 '의견'에 EBU(유럽방송연맹)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국 해당 '의견'은 2015년에 열리는 WRC-15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가닥이 잡혔다.

정리하자면,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은 WRC-12의 공식의제가 아니며, 일부 국가에서 통신용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으로 다뤄졌다는 뜻이다. 즉 일부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이 부족한 유선망을 대체 할 수 있는 4세대 이동통신을 도입하기 위해 전파 특성이 좋은 700MHz 대역 사용이 시급하다며 해당 주파수의 이동통신용 분배를 긴급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디지털 방송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반대했으며, 결국 관련 사안은 차기 회의가 열리는 2015년 WRC-15에서 다루기로 합의된 것이다.

다음은 WRC-12의 공식 보고서 원문 일부와,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resolves 1 to allocate the frequency band 694-790 MHz in Region 1 to the mobile, except aeronautical mobile, service on a co-primary basis with other services to which this band is allocated on a primary basis and to identify it for IMT; 2 that the allocation in resolves1 is effective immediately after WRC-15; 3 that use of the allocation in resolves1 is subject to agreement obtained under No. 9.21 with respect to the aeronautical radio navigation service in countries listed in No. 5.312; 4 that the lower edge of the allocation is subject to refinement at WRC-15, taking into account the ITU-R studies referred to in invites ITU-R below and the needs of countries in Region 1,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5 that WRC-15 will specify the technical and regulatory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mobile service allocation referred to in resolves 1, taking into account the ITU-R studies referred to in invites ITU-R below, (region 1의 경우 broadcasting이 primary이며, mobile 할당은 co-primary 의 할당이며, 이 역시 2015년 WRC-15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5.313A The band, or portions of the band 698-790 MHz, in Bangladesh, China, Korea (Rep. of), India, Japan, New Zealand,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and Singapore are identified for use by these administrations wishing to implemen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IMT). This identification does not preclude the use of these bands by any application of the services to which they are allocated and does not establish priority in the Radio Regulations. In China, the use of IMT in this band will not start until 2015. (WRC-12)
(위의 원문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김정삼 당시 구 방통위 주파수 정책과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WRC-12가 700MHz 주파수의 글로벌 통신을 성급하게 정의내린다는 문제의 보도자료에 대

해 "해당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는 했다"는 전제로 "유럽은 방송용으로 쓰고 있어 확보를 못 할 수도 있고 '인접국가'간 간섭문제 등으로 2015년까지 연구를 하기로 한 것"이며 "분배한 것은 결의한 것이고 기술적 조건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한 부분은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 자체를 안 하면 논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태지역 결의에 따라간 것"이라고 설명하며 "700MHz에 대한 이동통신용 사용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시 정리하면, WRC-12에서 일부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가 공식의제가 아닌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활용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구 방통위가 이에 동조했지만, 방송 선진국인 유럽 EBU의 반대에 직면해 결국 해당 논의는 3년 후인 WRC-15에서 다루지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구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 글로벌 통신 활용"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셈이다.

하지만 진위야 어찌 되었든 그 여파는 상당했다. 당장 대부분의 언론은 구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어부지기에 가까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대량 오보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굳어진 구 방통위의 회한하고 교묘한 전략은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주파수 통신 활용의 롤모델인 미국에서 Apple의 아이폰 5s가 700MHz 대역 주파수 BC 12, 13, 14, 17 중 BC 13과 17만 지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700MHz 대역 주파수 중 BC 12 중 A 블록의 군소 통신사가 집단 반발을 해 FCC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도 마찬가지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글로벌 통신 활용은 이미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음에도 미래부와 통신사들은 이 논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을 매개로 주가 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C&K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C&K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으며, 대한민국 외교부는 별도의 확인 없이 이를 외교적 성공으로 포장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많은 언론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이를 받아쥔고, 결국 끔찍한 파국을 맞았다. 구 방통위의 잘못된 보도자료도 당시의 외교부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도 700MHz 주파수의 글로벌 통신 활용이라는 무덤을 확대시키고 재생산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흔들리는 대한민국 UHD TV 정부 정책 난맥상에 장비 국산화도 요원

먼 옛날 인간은 '말'이라는 동물을 만나기 전, 자신이 사는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당연히 인간의 사고는 정제되어 있었으며, 자신이 보고 느낀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인간은 말을 만나고 길들이며 변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인간의 물리적 속도는 빨라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고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결론을 낳았다. 말이라는 하드웨어가 인간이라는 소프트웨어와 만나는 순간, 문명은 꽃피우기 시작했다.

UHD TV는 방송기술은 물론, 방송 시장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화두다. 당연히, UHD TV의 등장은 그저 화질이 좋아진다는 일차원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을 타면서 사고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듯이, UHD TV는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무한한 상상력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한다. 소프트웨어를 발전의 길로 이끄는 하드웨어의 힘, 혹은 플랫폼이 콘텐츠의 미래를 결정짓는 동력. 일반적인 발전의 범주에서 벗어난 진보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가 UHD TV에 주목하는 이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UHD TV는 안녕하지 못하다. 크게는 정부 정책의 난맥상과 어긋난 비전, 작게는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동력상실이고 원인이다.

UHD TV의 발전 주체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방송 정책의 한 축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을 진흥과 부흥의 시각으로만 성급히 재단해 '돈을 벌 수 있는 가치'로 모든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UHD TV는 표류하고 있다. 우선 주체의 문제다. 미래부는 UHD TV 발전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인식해 유료방송 중심으로 진흥전략을 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골적인 밀어주기 상황도 드러난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큰 틀 안에서 유료방송 UHD TV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상파 UHD TV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KBS를 중심으로 지상파 UHD TV가 보편적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미래부의 이해하지 못할 고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방송 콘텐츠의 80%는 지상파를 통해 제작되고 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미래부도 할 말은 있다. UHD TV는 유료방송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와 강력한 교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는 명백한 종합편성채널 특혜인 8VSB 허용 등으로 콘텐츠 산업의 붕괴를 야기시키는 정책을 구사하는 미래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UHD TV를 특정 시청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로 육성하는 방안이 대중적이고 공공적인 인식에서 한참이나 벗어났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료방송 중심의 UHD TV 발전이 산업발전의 낙수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헛된 믿음도 문제다. 이것은 최근 프란체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을 통해 경제적 낙수효과를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난맥상 외에도 대한민국 UHD TV를 위협하는 요인은 많다. 그중에서도 국산 장비업체의 UHD TV 기술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 문제다. 열릴 뻔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UHD TV가 막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마당에 이진 무슨 말인가?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우선 국내 제조사들의 UHD TV의 기술력이 세계 수준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점점 보급화의 흐름을 타기 시작한 UHD TV 가격이 일종의 변수로 부상하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중국의 파상공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담이지만 삼성전자가 선보인 세계 최대 110인치 UHD TV의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이 아니라 중국 BOE의 제품이다) 또 HDTV 시장에서 대한민국에 밀린 일본의 앞선 UHD TV 기술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내 제조사들은 UHD TV 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무기로 삼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 등 각 나라들이 저렴한 가격과 막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사의 입지를 흔드는 점은 시한폭탄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싱클레어 방송그룹을 필두로 하는 미국의 존재도 변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다른 UHD TV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디스플레이 기술은 삼성전자와 LG전자라는 양대산맥이 기술의 발전을 견인한다고 해도, UHD TV를 제작할 수단에 있어 대한민국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UHD TV 방송과 영화가 본격적으로 제작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UHD TV 카메라와 편집기, 저장기, 심지어 소소한 마이크 하나도 국산 제품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실제로 최근 막을 내린 CES 2014에서 일본의 소니는 UHD TV 4K 워크플로우를 통해 카메라와 편집기, 송출기를 아우르는 막강한 라인업을 구축했으며 할리우드 제작사의 단골 장비업체인 레드도 성능을 대폭 개량한 UHD TV 카메라를 출시했지만 국내 장비업체는 잠잠하기만 했다.

현재 대한민국 UHD TV는 총체적 난국이다. 막강한 콘텐츠와 플랫폼 가능성을 타진하는 지상파는 정부의 정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간을 이루는 장비업체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당장 UHD TV 제작 시스템의 안착으로 기존 방송 장비의 교체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졸속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정부의 유료방송 중심 UHD TV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수시장을 주도하는 지상파의 UHD TV 역량을 무시한 결과 관련 장비 국산화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심지어 모바일 공개로 플랜 2.0과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지상파 UHD TV의 재원인 방송용 필수 주파수만 박탈할 뿐이다. 방송과 주파수의 민영화, 아니 사영화의 차원에서 지상파는 고사 직전이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UHD TV는 표류하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2014년 방송의 갈 길, DTV 전송방식 투쟁의 역사에서 묻다

대위기의 시대. 백척간두에 선 우리는 시대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기본적인 질문이 우리를 2000년대로 자연스럽게 안내한다.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그 안에 내재된 정부의 노골적인 유료방송 중심 정책과 지상파 방송의 형해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방송-통신 주파수 쟁탈전, 지상파 MMS와 UHDTV의 미래 및 난시청 해소와 방송 정책 이분화. 현재 대한민국 방송은 거대한 사영화의 바람에 휘둘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 인프라를 해체하여 사익을 위한 도구로 둔갑시키는 한편, 허망한 경제적 낙수효과를 꿈꾸며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방송은 자신의 역할을 잡지 못하고 치명적인 방향 속에서 표류하며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은 조금씩 사양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대위기의 시대. 백척간두에 선 우리는 시대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기본적인 질문이 우리를 2000년대로 자연스럽게 안내한다.

이에 본지는 '2014년 방송의 갈 길, DTV 전송방식 투쟁의 역사에서 묻다'를 통해 1부. 꿈틀대는 DTV 전송방식, 그 뜨거웠던 시간에 이어 끈질기게 순환하는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모색해 본다.

2부. 미완의 성공에서 피어난 희망

2003년 5월, KBS가 정식으로 미국식 DTV 전송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어 6월에는 DTV 특별 대책반이 출범했으며 7월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디지털 전환 일정 자체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러자 결국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KOBETA)를 중심으로 하는 DTV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19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장장 6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투쟁을 시작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DTV 비상대책위원회는 삭발식 및 가두홍보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했다. 그 과정에서 KBS, MBC, EBS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일정 백지화를 정식

지털 방송 저지를 위한 5대 광역시 순회집회에 돌입했으며 12월 4일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위원회에 광역시 디지털 방송 연기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그리고 12월 17일 MBC 노동조합은 광역시 디지털 방송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이에 한 발 물러난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함께 해외 사례조사 결과 및 MBC 비교시험 결과 검토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사진 3] 2003년 10월 24일 정보통신부 해체 촉구 기자회견



[사진 4] 2003년 11월 26일 철야농성 100일, 광역시 디지털 전환 저지 투쟁 선포식



[사진 5] 2003년 11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 광역시 디지털 방송 저지를 위한 5대 광역시 순회집회



[사진 1] 2003년 8월 21일 디지털 방송 광역시 전환 저지를 위한 삭발투쟁



[사진 2] 2003년 9월 3일 방송의 날, 디지털 방송 광역시 전환 중단 및 변경방식 촉구 기자회견



[사진 6] 2003년 12월 1일 대전방송 광역시 송출 저지 투쟁



[사진 7] 2003년 12월 23일 전국 방송인 총파업 결의대회

의했다.

이와 별도로 12월 19일 방송사 노동조합은 광역시 디지털 방송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같은 날 KBS 노동조합도 전격적으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12월 23일 전국 방송인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자 12월 26일,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역시 디지털 방송 연기 결정을 정보통신부에 정식으로 통보한다. 그러자 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부랴부랴 5개 항의 대책안을 발표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노무현 대통령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하지만 2004년 1월 9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미국식 DTV 전송방식을 관철시키겠다는 발언을 하며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갔다. 동시에 1월 19일 방송위원회가 광역시 디지털 전환일정 중단을 선언했으며 1월 26일 전국 방송인 DTV 비상대책위원회는 161일만에 철야농성을 중지한다. 이어 1월 30일 노성대 방송위원장,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정연주 KBS 사장,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등 4인 대표를 비교시험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 그리고 7월 8일 4인 공동 대표단은 DTV 전송방식에 최종 합의한다.

DTV 전송방식은 결국 미국식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잘못된 결정은 결국 대한민국 주파수 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야기시켰으며, 지금도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주파수 비효율에 따른 방송 주파수의 부족, 여기에 연쇄적 반응을 일으키는 700MHz 대역 주파수와 보편적 UHDTV 활용까지. 하지만 2000년대를 뜨겁게 달군 DTV 전송방식 투쟁은 완전한 실패가 아니다. 올바른 방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신념이 모여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지금도 방송기술인의 DNA에 각인된 궁극적인 비전으로 타고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DTV 전송방식의 개략적인 정리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이에 김평호 단국대학교 교수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미국방식과 유럽방식 간의 대립’을 기본축으로 한 DTV 전송방식 논란은 지난 2000년 8월부터 시작해 2004년 7월에 비로소 종식된, 만으로 따져 4년여에 걸친 길고 지루한 논란이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 디지털 방송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정통부와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기술의 개발은 물론 정책적 도입방안이 모색되었다. 정통부는 방송과 관련한 국내 가전산업이 수신기에 편중되어 있어 디지털 소프트웨어 산업, 즉 방송프로그래밍과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기반이 취약해 이를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디지털 방송 도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산업적, 경제적, 기술적 기대와 전망을 바탕으로 디지털 방송을 도입함에 있어 무엇보다 각 매체별 기술표준 선정이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표준선정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들 협의체를 통해 지상파 DTV는 지난 1997년 11월에 미국방식으로, 위성방송은 2000년 12월 유럽방식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 축인 데이터 방송 부분은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지상파 DTV는 2001년 5월 미국방식으로, 그리고 위성은 2001년 7월 유럽표준방식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이후 2000년 중반까지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던 디지털 전환 정책은 1999년부터 미국 스스로 정한 표준이 유럽방식에



[사진 8] 2003년 KBS 정연주 사장 면담

비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내부의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논란이 개시되었다. 이같이 시작된 지상파 DTV 기술표준 논란은 시기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앞서 설명한 마지막 합의의 과정을 제외하면 대략 다음의 3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1차적인 논란은 2000년 중반부터 2001년 중반까지 KOBETA 등의 전문가 단체와 언론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비교실험을 거치지 않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에 대한 기술비교 실험요구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2차적으로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 방송위원회가 후원하고 지상파 DTV 비교시험추진협의회가 문화방송 주관으로 시행한 비교실험 이후에는 실험결과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미국방식을 여전히 기술표준으로 유지하려는 정통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3차적으로는 기존정책을 고수하려는 정통부에 대해 2002년 초부터 방송기술 전문가 단체, 언론유관단체뿐 아니라 YMCA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가세, 유럽방식으로서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논란은 DTV 소비자 운동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약간의 소강상태를 겪기도 했으나 KOBETA와 언론노조, 방송사 노조 등은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국회 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2002년과 2003년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었다.

이러한 팽팽한 대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논란이 점차 사회적으로 증폭되었고 특히 KOBETA, 언론노조 등의 집중적인 2003년 하반기 농성투쟁 이후 DTV 전송방식 문제는 방송계 최대의 현안이 되었다. 이후 2003년 10월부터는 방송위원회와 방송협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 정통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1)정통부와 관련 산업계, 방송사, 학계인사들로 구성된 해외 디지털 TV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단 활동과 보고서 작성 2)MBC 비교시험 자료검증 작업의 진행 3)KBS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방식비교시험 실시 4)방식 전환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문제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 등 논란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점차 그 틀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논란해결 노력은 2004년 1월 정통부, 방송위, 언론노조, KBS 등의 4자간 논의의 틀로 발전되었고 이후 약 6개월 여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급 및 대표자간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논란종식 시점까지 광역시 디지털 전환 일정이 연기되는 등 전송방식 표준문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는 정통부 등의 태도가 여전히 완강해 몇 차례의 교착상태를 거치는 어려운 고비를 겪기도 했다. 이후 4자간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4년 여에 걸친 지상파 DTV 전송방식 표준논란은 종식되었다. (3부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사진 9] 김수현 KOBETA 당시 연합회장 1인 시위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협받는 언론의 현실, 혁신하자

최근 연이어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고무적이다. 우선 법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정영하 전 본부장 등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고, MBC가 해직 언론인들에게는 2,000만 원씩, 다른 징계자들에게는 1,000만 원씩 배상하도록 한 부분은 특히 고무적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재판부가 ‘공정방송이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하는것 같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먼저, 방송사 등 언론사 노조의 정의행위는 일반 기업의 경우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즉, 일반 기업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때에만 정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언론사 노조는 공정보도를 위해서도 정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수순이다. 우리나라처럼 노동조합 자체가 팔시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및 필수적인 표현의 판단을 유연하게 적용해 재판의 결정적인 단서로 포함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판결의 중요한 포인트는, 법원이 MBC 노조의 파업을 정당하게 봤다는 점이다. 당시 MBC 경영진이 절차적 규정 위반 및 인사권 남용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업을 한 만큼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많은 여지를 남긴다. 국회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여야 의원들의 해직 언론인 복직 결의문이 통과된 점과 더불어,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가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승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크다.

1월 초,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해임 무효 항소심 판결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에게 대한 사측의 해임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언론노조도 밝혔듯이, 신문사의 편집권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극히 거대한, 그리고 당연한 기본권의 범주에서 신문의 편집권을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에 재판부는 “신문사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영리성과 효율성에 입각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달리, 신문사의 편집권은

신문사 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2011년 당시 부산일보 사측이 개별 기사 내용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고 그 내용도 특정 정당에 편향돼 있었던 만큼 사측의 지시는 부당한 편집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정호 편집국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다. 법원은 부산일보의 편집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으며,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여기에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키포인트로 여겨진다.

하지만 거듭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켠에는 씁쓸함이 가시지 않는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과 더불어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한 긴 싸움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언론사의 경우에도, 심지어 법원의 모든 판결이 끝났음에도 정상적인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루한 법적 공방과 더불어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군사정권을 거치며 더욱 지능적이고 노골적인 사측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우회 전략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노태우 정권 당시 KBS의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KBS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서영훈 사장을 반강제로 몰아내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려 했다. 그

정 성 식 지역언론살리기운동본부 활동가

러자 노조는 당장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맞서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장장 38일동안 이어진 당시 투쟁을 통해 노조원 20명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구속된 김철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상황은 급변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4만 여명에 달하는 대사면 조치를 통해 구속된 KBS 노조원들을 풀어주었고 이들은 즉각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6부는 “KBS가 노사합의를 깨고 노조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화답하듯 사측은 즉각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복직된 이들은 KBS에서 고위간부직까지 역임한 후 대부분 평화롭게 정년퇴임했다.

민주 공화국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과 책임은 3권 분립이라는 기초아래 만들어진 하나의 기본권 존중 패러다임이다. 즉, 그 어떤 누구도 기본권을 훼손해서는 곤란하며, 이를 바탕으로 3권 분립의 주체가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한다.

물론 비선라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선라인부터 명령이 전달되는 체계는 민주 공화국의 진면목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해직 언론인에 대한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 합의에 담긴 참 뜻을 사측이 인정하길 바란다.

방송, 가전과 동거해야

최근 막을 내린 CES 2014의 화두는 무엇일까. 다양한 대답이 가능할것 같다. UHDTV와 카메라, 스마트가 등등. 하지만 CES 2014의 진정한 핵심은 더 큰 범주에 속한 고차원적인 패러다임이다. 바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가전의 힘이다.

가전제품은 우리의 일상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핵심적인 디바이스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는 첨단과학이 살아있으며, 이러한 과학은 엄청난 발전을 통해 지금도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필립스전자가 CES 2014에서 공개한 필립스 프리미엄 무선 스피커 시스템인 피렐리오 E5가 홈시어터 오디오 부문의 베스트 오브 CES(Best of CES)를 수상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필립스 피렐리오 E5는 지난해 11월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 홈시어터 스피커 부문에서도 베스트 이노베이션상을 수상한 바 있지만 이것으로 수상의 가능성을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바로 IT와 가전의 동거가 가장 훌륭하게 구현된 제품이기 때문이다.

필립스 사운드 제품은 CES 2014를 방문한 이들로부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질감, 완벽한 무선 스피커 시스템 구축 등 예전부터 사운드 분야의 혁신을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피렐리오 E5는 훌륭한 디자인과 사운드, 어떤 스마트 기기와의 호환 가능한 활용성 등 제품력이 훌륭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즉, 가전과 IT의 결합에 이은 웨어러블과의 만남이 대성공을 이룬 것이다.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가전제품에 IT를 접목한 신기술을 시연하는 것. 그것이 바로 CES 2014의 진짜 핵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필립스는 CES 2014 내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과 소니, 샤프 등 일본 기업, 하이얼, 하이센스 등 중국 기업 등 동양 3국이 센트럴홀을 대거 점령하는 바람에 기존의 강자들이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CES 2014에서 확인이 가능한 미래는 가전, 즉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는 IT의 비전이다. 그 동안 IT와 가전의 영역이 자주 만나며 충실한 시너지 효과를 냈다면, 이제 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 동거에 가까운 공생에 접해있다는 결

론이 나온다.

이러한 역량이 바로CES 2014를 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더욱 각광을 받았던 이유기도 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하나시스가 CES 2014 기간에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듀얼코어 기반 안드로이드 포스, 듀얼터치가 가능한 모바일 결제모듈, 바코드 스캐너를 탑재한 포스, 제4세대 인텔 CPU를 탑재한 포스 등을 선보여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전했다. 아이디어 상품이다. 가전과 IT가 결합한 진정한 발전의 미래를 보여줬다.

이제 방송의 시간이다. 방송도 가른 가전제품들이 IT와의 밀접한 만남을 통해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만큼, 이에 걸맞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여야 한다. 여기에는 시청자를 고객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단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일차적인 수신환경에 이어 그 시청자가 가지는 내밀한 생활패턴을 간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련된 감각은 케이블이나 IPTV 사업자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일은 아무

윤 성 일 미디어혁신패러다임연구소 2팀장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웨어러블 IT의 발전이 전체 뉴미디어 플랫폼을 담아내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만큼, 이제 방송도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야 한다.

방송과 IT, 그리고 가전과의 동거는 웨어러블을 기점으로 하는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에브리웨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친밀한 가전의 등장은 방송의 고민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CES 2014는 물론, 최근 IT 관련 박람회에서 스마트카가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카는 이동수단과 IT가 결합된, 이른바 두 이질적 매개체의 화학적 결합이다. 우리는 N-스크린을 통해 방송과 IT를 넘어선 새로운 동거를 방금 확인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더욱 사람들의 생활에 친밀하게, 그리고 재미있고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의외로 우리의 방송은 실생활에 근접한 접근성과 밀접도를 표출하고 있다. 방송, 그래서 가전과 동거해야 한다. 그것이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며, 서로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다.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발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 터 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 독 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SONY



OFFICIAL PARTNER

4K

Sony 4K Live Evolution

F55 4K 라이브 카메라 시스템

MVS-8000X
4K 프로덕션 스위처SR-R1000
4K 레코더/스토리지PWS-4400
4K XAVC 서버PVM-X300
4K 프로페셔널 모니터

4K Bravia TV

VPL-VW1100ES/VW500ES
4K 홈 프로젝터SRX-T615
4K 시네마 프로젝터4K로 만나는 감동의 순간
Beyond Definition

Sony Korea Corp. Professional Solutions Division Company

■ 제품정보 : <http://ps.sony.co.kr> ■ 기술지원 : (국번없이)1588-7313 <http://bpeng.sony.co.kr>
 ■ 대리점 : 서울 • (주)베스코에스아이: (02)716-9722 • (주)지엘에스: (02)2165-8777 • (주)캐스트정보: (02)3453-5148 • (주)한국에비스: (02)322-3264
 부산 • (주)아이엠비테크: (051)257-7087 • 제너스디지털: (051)638-2210 / 대구 • (주)진명아이앤씨: (053)426-6900 / 광주 • (주)수창미디어: (062)654-2500
 ■ A/S센터 : • (주)참택엔지니어링: (02)784-9912 부산지사: (051)861-5866 • (주)시오인포: (02)786-0433 용산지점: (02)718-0434 • (주)나스텔: (02)780-3040 • 포엘: (02)761-9577